

전남도, 그린수소 핵심 수전해기술 상용화 첫발

산업부 '성능시험센터' 공모 선정 2024년까지 국비 153억 지원받아

전남도가 국내 그린수소 산업을 선도할 산업부의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성능시험센터 구축'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53억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시험센터 구축 후 수전해 시스템을 활용, 그린수소 생산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전남도의 구상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수전해 시스템 신뢰성 제고 성능시험센터' 공모는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유수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년간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다.

그린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전남도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이번 과제는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한 연구개발 과정의 최종 단계로 ▲수전해 시스템 장기연속 운영을 통한 신뢰성 확보 ▲재생전력 환경을 적용한 수전해 타입별 신뢰성 평가 시스템 개발 등이 목표다.

수전해 시스템이란 재생에너지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장치다.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미래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현재까지 국내 수전해 시스템 시장은 규모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소규모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따른 그린수소 중요성이 부각되면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전남도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국고등기술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 등 국내 유수 9개 전문기관과 영광 대마산단 6600㎡ 부지에 2024년까지 국비 153억원 등 총 237억원을 들여 시험동-관리동-출하시설 등을 포함한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1MW 규모 수전해 시스템 2기를 운영해 국내 첫 상용화로 생산한 그린수소를 인근 지자체의 수소충전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김진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선 그린수소가 핵심"이라며 "수전해 성능시험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세계 최초로 수전해 인증센터까지 구축해 국내 그린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등 전남을 그린수소 생산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

전환 기조에 발맞춰 청정에너지 수소생태계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전남 동부권의 여수 석유화학단지과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한 부생수소를 활용해 그레이수소와 블루수소를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대규모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한 '에너지 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월 정부 수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도 분청 11개 부서 14개 팀과 3개 유관기관이 함께 TF를 구성했다.

전남도는 각종 수소산업 관련 과제 발굴 역량을 결집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의 그린수소 생태계 조기 정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대표 관광자원은 무등산 시민 여론조사 결과 60% 꼽아 관광재단 설립 75.4% "모른다"

광주 시민 10명 중 6명이 무등산 국립공원을 광주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꼽았다.

광주시의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에 의뢰해 광주시 관광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시민 62.8%가 광주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무등산을 선택했다. 이어 음식(9.2%), 5·18민주화운동(8.2%), 광주비엔날레(3.8%) 순으로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17일까지 18세 이상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했다.

지역 관광 자원 중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식도락이 26.2%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24%, 자연 22.2%, 역사 16% 순이었다. 개선 사항은 정갈·위생 31.2%, 편의시설 26.6%, 교통환경 25%, 물가·상도덕 12.8%, 안전·치안 1.8% 등이었다.

관광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해 설립한 광주관광재단에 대해 75.4%가 모른다고 답했다. 광주 관광 브랜드인 '오매 광주'는 62%가 모른다고 했다.

광주시의회 김나운(교육문화위원장) 의원은 "관광 전반에 대해 생생하고 진실한 의견에 우리 지역 관광의 현수소를 알게 됐다"며 "향후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영암 산란계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

올가을 전남 5번째, 전국 10번째

영암 삼호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올 가을 들어서 전남에선 5번째, 전국에선 10번째 확진 사례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방역당국은 지난 6일 영암군 삼호읍 산란계농장에 대해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내렸다.

지난 5일 농장주가 당국에 폐사 신고를 했고 전남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전남도는 의심축 신고 즉시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산란계 3만6000수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전남에서는 올 가을 들어 가금농장 5곳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나왔다. 육용오리 3곳(나주 2곳, 담양 1곳), 종오리 1곳(강진), 산란계 1곳(영암 삼호)이다. 전국에서는 충북 4곳, 충남 1곳을 포함해 가금농장 10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상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근원대책, 오리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고병원성 AI 차단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AI 발생은 생물학 및 동물생리학적 특성보다는 오리 농가의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 시설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AI로 인해 오리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고병원성 AI의 연례적 발생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오리 사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AI·일자리 성과...광주시, 고객만족경영 전국 ' 으뜸'

능률협회컨설팅 '경영 대상'

광주시는 7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고객만족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인공지능 중심 미래산업 육성,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실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등 정책 성과가 호평을 받았다. 현장 소통 강화, 시민 소통 채널 확대,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 체감 정책, 코로나 극복 민생안정, 미래세대 만족을 위한 혁신적 시정 운영 등 6개 분야에서 두루 좋은

점수를 얻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김종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인정받아 의미가 있다"며 "시민 생활 모든 면에서 고객 만족 시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의회 시민참여예산 삭감...민원성 예산 끼워 넣기 '빈축'

광주시의회가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무더기로 삭감한 반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성 쪽 예산은 대폭 끼워 넣기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상임위가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 심사를 마친 가운데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79건, 102억원 사업 예산 중 41건, 60억원(59%)이나 삭감했다. 반영된 사업은 38건, 42억원(41%) 수준이다.

지난해 61건, 89억원 중 52건, 68억원(77%)이 반영된 것과는 크게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각 상임

위에서 삭감된 구체적 예산은 보행환경개선 사업비 20억원을 비롯해 조대 공대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정비(5000만원), 송산유원지 주변 도로정비(5000만원) 등이다. 의원들은 이들 사업이 대부분 중복사업이나 민원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교통건설국 시민참여예산 사업 30건, 4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성 도로 개설 및 정비 사업비를 무더기로 끼워 넣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의 민원성 증액 예산은 임동천면 우로 보도정비(2억5000만원)를 비롯한, 신안동 스타벅스 주변 보도정비(1억원) 등 23건에 이른다. 대부분 자치구 현안도로 개설사업으로, 각 구별로 배분된 민원성·선심성 예산으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민원성 이거나 중복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교통건설국의 시민참여예산 전부를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예산안에 없던 끼워넣기 예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순천시 마을 단위 자급자족 전력시스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 추진

(재)녹색에너지연구원은 7일 "순천에서 에너지 소비 대체율 5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기반 융복합형 마을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이크로그리드는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한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소지형 특성에 맞게 적용한 것을 말한다.

이번 실증 기술개발은 마을단위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전력시스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전남지역 에너지 기업과 협력해 마을 단위로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 예산은 총 67억 원으로 국비 51억 5000만 원, 과제 참여기업 부담 15억 5000만 원이다. 오는 2024년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녹색에너지연구원은 과제수행을 위해 ㈜유에너지, ㈜인코어 테크놀로지스 등 5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 과제 기획을 추진했다. 순천만 국가정원, 대동봉 에너지 자립마을 등 5개소를 실증 대상으로 선정했다.

실증 설비는 이미 설치한 태양광설비 4MW, 지열 263kW, 에너지저장장치(ESS) 5.3MWh와 추가 구축하는 태양광 300kW, 연료전지 20kW, 에너지 저장장치 200kWh 등이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광역시 2022년 신규 규제자유특구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공고

광주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활발한 사업활동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역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대학, 연구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2월 8일
광주테크노파크원장

목적 및 내용

- ◆(목적)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을 통해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적인 기술개발 및 활발한 사업활동 도모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법률 공포(18.10.16) 및 시행(19.04.17)
- ◆(규제자유특구란?)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 되는 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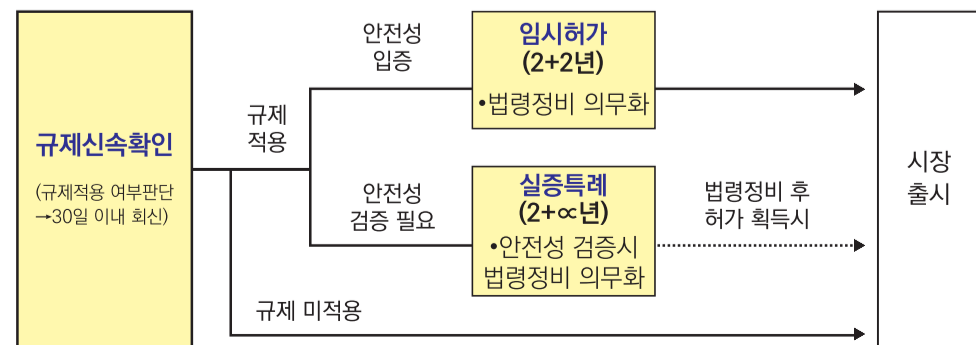
공고 및 접수 일정

- ◆(조사대상)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유관기관(연구소, 대학, 진흥기관 등)
- ◆(조사내용) 제안사업, 관련규제 및 제도 개선사항, 현재사업 추진현황 등
- ◆(조사기간) 2021년 11월 16일(화) ~ 12월 17일(금)

규제자유특구 지정 혜택

- ◆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각종 규제로 신기술 검증이나 사업화가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적용
 - * 기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각종 재정지원 및 세금, 부담금 감면 혜택 기회
- | 구분 | 혜택내용 |
|------|--|
| 재정지원 | ①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 R&D 지원
② (사업화지원) 참여기업 책임보험,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③ (인프라) 실증 기반 시설·장비구축 등 지원 |
| 기타지원 | 투자세액 조세 감면 및 일부 기업부담금 감면 혜택 |

규제자유특구 활용 방법



규제자유특구 발굴 규제

- ①(메뉴판식 규제특례) 식당의 주문 메뉴판처럼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 이중 해당되는 규제가 있고, 추후 특구사업자로 지정 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유예 또는 면제
※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 <http://rfz.go.kr/?menuuno=149>
- ②(규제혁신 3중 세트)
 - (규제 신속확인) 규제여부 불명확 시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30일 이내 화신 받을 수 있음
 - (실증을 위한 특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추후 특구사업자로 지정 시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 가능
 - (임시허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을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 추후 특구사업자로 지정 시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 가능

※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세부내용 및 제출처 확인